

韓 평화부터 잠수함 사업까지…李, G7서 외교 광폭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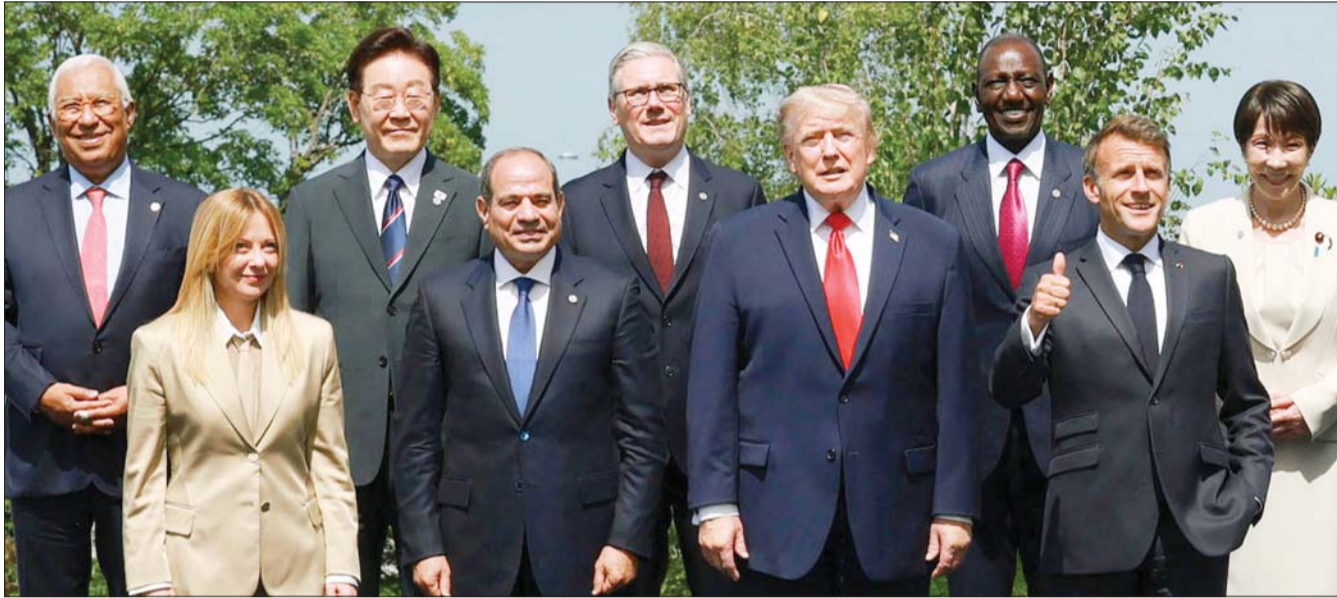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 논의, 독일, 경제·산업 등 협력 공감대 캐나다, 에너지 공급망 확대 뜻모아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외교 행보를 넓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 위치한 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브라질(루이스 이나시우 룴라 다 시우바 대통령), 인도(나렌드라 모디 총리), 케냐(윌리엄 루토 대통령)에 이어 포도준으로 입장한 이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4월 초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위해 정상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 약 30초간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 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다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앞줄 왼쪽부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뉴시스

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식 만찬장에서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다.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촬영 직후 이어진 G7 정상회의 첫 번째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확대세션 전후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와

의 양자 회담에서 경제·산업·과학기술·안보 등 제반 분야 협력 증대에 공감하며 중동 전쟁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양국 정상은 방산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메르츠 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독일로서도 EU 회원국

간 협력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 메르츠 총리는 오는 10월 말 방한 예정이라면서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경제·산업·방산·과학기술·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메르츠 총리는 10월 아태비즈니스회의의 계기에 방한할 계획임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방한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가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 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에틀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해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도 한국과 캐나다 정상은 중동 정세 및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원유, LNG,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 및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 간에 잠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李 대통령 “AI 혜택 전 인류와 공유”… 국제협력 강조

확대회의 세션 참석해 AI 비전 제시
공적 재원 활용 민간 투자 촉진 등
수원국·공여국 간 발전 방안 모색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확대회의의 첫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에게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G7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 국제 연대 재건이라는 제목의 첫 세션에서 개발협력을 통한 수원국의 자립 역량 제고와 수원국(수혜국)과 공여국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브라질 등 5개 초청국 정상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및 시디 울드 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에도 많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을 짚으며 “민간 투자를 통해 수원국에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와 파트너국의 국내 재원이 함께 동원되어야 하며,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적 재원을 활용해 수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형 공공재’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코이카(KOICA)가 최근 5년간 인도

네시아에서 농업, 에너지, 환경 분야의 12개 현지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100만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만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격차가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수원국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AI의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소개했다.

아울러 “개발 협력의 성과는 투입된 재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수원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코이카와 우리 기업이 함께 설립한 ‘IG직업 훈련학교’ 사례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데 나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세션이 끝난 후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등 3개 문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G7과 함께 이들 문서 모두에 지지를 표명하며, 개발협력과 보건안보 분야에서 G7 및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서예진 기자

국힘 장동혁 지도부 소청 강행에 반발 확산

서울 등 6개 지역 선거무효 소청 제기
비당권파·친한계 의원들 비판 목소리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소청을 밀어붙이면서, 의원총회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를 나누지 못한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장 대표는 충북 등에 대한 소청까지 검토하며 재선거 여론 물이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 소장파나 친한(친한동

훈)계 등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피하려고 ‘재선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날(16일) 당내 초계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측이 정 원내대표에게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날 의총이 개최됐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 원내대표 발언 직후 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하지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이 비공개 직전 공개 발언을 신청하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송 의원은 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직후 손을 들고 “공개 발언을 신청한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들이 “비공개로 하자”고 외쳤다. 하지만 송 의원은 송 의원은 “공개 발언할 사람은 공개 발언하고, 비공개로 할 사람은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발언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의총 사회를 맡은 박상웅 의원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지만 송 의원은 “어차피 다 공개될 텐데”라고 주장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러면 나가서 하시오. 나가서”라고 말하자, 송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당이 대내외적으로 불통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당 모습이 된 것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의원은 “어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느냐. 최악은 무슨 최악이냐”고 반박했고, 다른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태며 설전이 이어졌다. 결국 송 의원의 공개 발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는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직접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권영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신청하고 장 대표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청 기한이 이날까지만 만큼, 의원총회는 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 도중 취재진을 만난 의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쟁점은 소청 범위다. 당초 최고위에서 논의된 6개 지역 외에 전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장 대표는 소청 범위를 전국 16개 지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선거 소청은 참정권 침해가 실제 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 기한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인 만큼, 장 대표의 거취 논의는 중점적으로 다루지지 않은 모양새다. /서예진 기자